

미국 'Secure America Act' 제정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2026년 6월 10일 'Secure America Act'(S.2)가 미국 연방법률로 공포되었다. 이 법은 국토안보부(DHS) 산하 기관인 이민세관단속국(ICE)과 세관국경보호국(CBP)의 인력·기술·집행 역량을 확대하기 위해 총 약 695억 달러 규모의 추가 예산을 투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6. 06.

KIPPEC Korea Inter-Parliamentary
Exchange Center

KIPPEC 현안보고서는 워싱턴 D.C.에서 논의되는 주요 입법 및 정책 현안을 다루는 심층 분석 보고서입니다. 본 시리즈는 매월 정기적으로 발행되어 관련 쟁점과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1. 개요

2026년 6월 1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Secure America Act'(S.2)에 서명하여 법률로 공포하였다. 동 법은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공화, 사우스캐롤라이나)이 2026년 5월 20일 발의한 법안으로, 상원(52대 47, 2026년 6월 5일)과 하원(214대 212, 2026년 6월 9일)을 각각 통과한 후 최종 제정되었다. 동 법은 총 약 695억 달러(약 104조 원, 환율 1달러=1,500원 기준) 규모의 추가 예산을 투입하여 국토안보부(DHS) 산하 기관인 이민세관단속국(ICE)과 세관국경보호국(CBP)의 인력·기술·집행 역량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민단속 인력 증원, 구금시설 확충, 국경감시 기술 고도화, 추방 집행 역량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배정된 예산은 2029년 9월 30일까지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 법은 최근 미국에서 제정된 국경안보 및 이민단속 관련 법률 가운데 최대규모의 추가 세출예산을 배정한 사례로 평가되며, 향후 미국의 국경관리 및 이민집행 체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2. 입법 배경

Secure America Act는 국경안보 강화와 불법이민 억제를 핵심 정책 과제로 제시한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를 반영하여 추진되었다. 공화당은 국경단속 인력과 시설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ICE와 CBP의 집행 역량을 대폭 확대하기 위한 추가 예산 확보를 추진하였다. 민주당과의 협상이 결렬되면서 공화당은 예산조정(Reconciliation) 절차를 활용해 법안을 통과시켰다.

3. 주요 내용 및 쟁점

1) ICE 및 CBP 의 이민단속·국경관리 역량 확대

동 법의 핵심은 DHS 와 산하 기관인 ICE 와 CBP 에 대규모 추가 예산을 배정한 데 있다. ICE 에 약 385 억 달러, CBP 에 약 260 억 달러를 지원하며, 추가로 50 억 달러를 국토안보부 장관의 재량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ICE 는 추가 예산을 활용하여 단속 인력을 증원하고, 구금시설 수용 능력을 확대하는 한편 불법체류자의 이송 및 추방 절차를 보다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또한 CBP 는 국경순찰대 인력을 확대하고, 국경장벽 및 감시 인프라 구축, 첨단 감시장비 도입 등을 통해 남부 국경의 통제 및 감시 능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2) 국경감시 기술 및 AI 기반 통제체계 확대

동 법은 인력 확충과 함께 국경안보 역량 강화를 위한 첨단 기술 기반의 감시·통제 체계 구축에 약 34 억 5 천만 달러를 배정하였다. 주요 사업에는 비침습 검사장비¹, 국경 감시체계, 자율형 감시탑², 항공·해상 대응 플랫폼 확충 등이 포함되며, 이를 통해 마약 밀반입 차단, 불법입국 감시 및 국경지역 상황 인식 능력 제고를 추진하도록 하였다.

특히 인공지능(AI)과 머신러닝³ 기술을 활용한 자율형 감시체계 구축을 지원함으로써 국경지역의 인적·물적 이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탐지·분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생체정보 기반 출입국 관리시스템(Biometric Entry-Exit System) 구축을 지원하여 체류기간 초과 비자 소지자에 대한 추적 역량과 출입국 관리의 정확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전통적인 인력 중심의 국경관리 체계를 첨단 기술 중심의 감시·통제 체계로 전환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3) 287(g) 협정 확대 및 지방정부 역할 강화

동 법은 연방 이민당국과 지방 사법기관 간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이민 및 국적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INA)」 제 287 조(g)항에 근거한 287(g) 프로그램 확대를 지원하고 있다. 287(g) 프로그램은 ICE 가 주·지방 정부의 경찰·보안관 기관 등과 협정을 체결하여 일부 이민집행 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¹ 차량, 화물 컨테이너 등을 개봉하거나 해체하지 않고 X-ray, 감마선 등 영상장비를 활용해 내부를 검사하는 장비

² 인공지능(AI), 레이더, 열화상 카메라, 광학 센서 등을 활용하여 국경지역을 24 시간 무인으로 감시하는 통합 감시 체계

³ 대량의 데이터를 학습하여 사람·차량·동물 등을 자동으로 식별하고 이상 징후를 탐지하는 인공지능 기술

이에 따라 협정에 참여한 지방 사법기관은 구금자의 이민 신분 확인, ICE 행정영장 집행 지원, 추방 대상자 인계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동 법은 관련 예산과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연방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이민집행 역량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공화당은 해당 제도가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공공안전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과 이민자 권익단체들은 인종 프로파일링 발생 가능성과 이민자 사회의 법집행기관에 대한 신뢰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4) 예산조정 (Reconciliation) 절차 활용 논란

이 법안은 일반적인 입법절차에 따르지 않고 예산조정(Reconciliation) 절차를 통해 의결되었다. 예산조정 절차는 세입이나 세출 또는 부채한도와 직접 관련된 법안을 심의하기 위해 특별히 마련된 입법절차로, 상원에서 필리버스터(Filibuster)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일반 법안이 상원에서 사실상 60 표의 찬성을 필요로 하는 것과 달리, 예산조정 법안은 단순 과반수만으로 통과가 가능하다.

공화당은 국경안보와 이민단속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예산조정 절차를 활용하였다. 반면 민주당은 이민정책과 같이 사회적·정치적 파급효과가 큰 사안을 초당적 논의 없이 예산조정 절차를 통해 처리한 것은 의회의 일반적인 입법 절차를 우회한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다만 예산조정 절차는 연방 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만 포함할 수 있다는 제약이 있다. 따라서 이 법은 국경안보 및 이민단속 관련 예산을 배정하는 재정 법률의 성격을 갖는다. 그러나 대규모 예산 투입이 국경순찰대 증원, 구금시설 확충, 추방 집행 강화 등 이민정책 집행 역량 확대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예산조정 절차를 활용해 주요 이민정책을 추진한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4. 한국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동 법은 미국의 국경안보 및 이민집행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국내법이지만, 미국과의 인적·경제적 교류가 활발한 한국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교민사회, 한국인 유학생, 그리고 미국과 교류가 많은 우리 국민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첫째, 미국의 출입국 관리 방식이 보다 정교하고 기술 중심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법은 생체정보 기반 출입국 시스템 구축과 인공지능(AI), 머신러닝 등을 활용한 국경 감시 기술 도입을 위한 대규모 예산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불법체류자 단속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미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의

출입국 기록 관리가 더욱 체계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미국 입국 자체에 직접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더라도, 체류기간 준수 여부나 비자 조건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심사가 보다 엄격해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둘째, 미국 내 지역 사회에서도 단속 강화 흐름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 법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에 대규모 예산을 추가로 배정하여 인력 확충과 추방 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비자 만료 후 체류 중인 경우나 신분 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혹은 이민 재판이 진행 중인 사례 등에서 이러한 집행 강화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교민 사회에서는 미국 이민당국의 집행 강화가 실제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법은 실제 예산 배정을 통해 집행 역량을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마지막으로, 이번 「Secure America Act」는 미국의 국경안보 및 이민집행 체계 강화 방향을 보여주는 정책적 신호로 평가된다. 특히 예산을 활용한 인력 확충, 첨단 감시기술 도입, 지방정부와의 협력 확대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향후 미국의 이민집행 환경 변화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한국 정부와 기업, 교민사회 역시 이러한 제도 변화가 실제 집행 과정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KIPEC is registered under FARA. This material is distributed by the Korea Inter-Parliamentary Exchange Center (KIPEC) on behalf of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Additional information is on file with the Department of Justice, Washington, D.C.